수도권 지역 도시민의 귀촌지역 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귀촌지원 정책의 영향요인 분석*

- 태안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Decisions on Returning Homes of Urban Residents and Support Policy Back-to-village of Local Government

- Focusing on the Case of Taean County in Korea -

심 문 보 (한서대학교 공항행정학과 교수 - 주저자)
정 건 섭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Abstract

Moon-bo Sim / Kyoun-sup Chung

In this paper, we are trying to find out that there is making a difference between groups of returnees in the metropolitan area, regarding the decision of returning their hometown. We investigate what kind of factors make them reveal the preferences as to acquiring information on hometown and supporting policies for returning to their hometown, depending on gender, age, occupation, income and reg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factors affect local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for returning their home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171 urban resi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analysis showed that urban residents in metropolitan areas chose back-to-village home; because, they were more concerned with the environmental consideration and healthy lives rather than economic ones. In addition, the villagers had a relatively high level of satisfaction in obtaining the village information through the villagers' exhibition fairs and acquaintances. As the support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re concerned, they believe that the guidanc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building intimacy with local residents and building permits are important.

Keywords: Local Government, Local Residents, Returning to Rural Area, Support Policies on Returning to rural Area, Urban Residents

* 이 논문은 2019년도 한서대학교 교내연구과제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 론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촌인구가 급속히 도시로 이동하는 이른바 이촌향도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도농 간에는 대도시 과밀화와 농촌의 과소화라는 상반된 문제가 발생하여(우성호, 2014) 농촌인구는 급속하게 감소되고 고령화되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2018)의 연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인구가 10% 이상 감소한 시·군·구는 총 62개이고, 이 가운데 농촌지역인 군의 경우에는 33개 지역으로 전체의 과반이 넘는 5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4.3%에서 2060년에는 41.0%가 될 것이며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4곳, 1,383개 읍·면·동 지역이 인구소멸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 고령화 및 소멸화의 위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계개방에 따른 시장 어려움과 환경적 부담 확대로 인해 지속가능성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 붕괴는 안전한 음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문제를 만들어 도시 소비자의 건강에도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농촌 활성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김종선, 2017)

최근 농림축산식품부(2018)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귀농·귀촌인 통계 발표에 의하면 2018년 도시민 47만여 명이 농촌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2018)가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2018년 귀촌가구는 334,129가구로 전년(322,508가구)보다 11,621가구(3.6%) 증가하였고, 귀촌 가구 수는 2013년 280,838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연평균 증가율 4.4%)하여 2017년에는 334,129 가구가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도시지역의 은퇴자들이 농촌지역으로 귀촌하는 이유는 직장 은퇴 후 소득의 감소로 생활비가 저렴한 지역을 선호하고, 자연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주(노승철, 2015)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귀촌 추세가 최근처럼 지속될 경우 2013년 930만 명(주민등록인구 기준)인 농촌 인구는 2033년에는 9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촌 이주 현상은 자연환경, 기후, 수자원, 문화·역사 자원 등 어메니티를 갖춘 곳일수록 농촌 인구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농림축산식품부, 2018)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귀촌 인구 증가추세에 맞추어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형별·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2030 청년세대와 5060 중장년 세대를 구분, 세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귀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2016)는 5060세대들이 은퇴 후 안정적으로 귀촌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귀촌 정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리더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알선 및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도시

민의 귀촌을 유도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촌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및 경험을 통해 귀촌 관심 층을 확대하고 있어, 도시민의 귀촌지역 선택요인과 자치단체의 귀촌지원 정책들에 관한 체계적이고·과학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수도권 지역 도시민들이 은퇴 후 귀촌지역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귀촌관련 정보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습득하여 활용하며, 귀촌자들이 희망하는 자치단체의 귀촌지원 정책들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려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귀촌 희망자의 성별, 연령, 소득, 직업과 농촌의 경험 유무에 따라서 귀촌지역 선택과 귀촌정보 및 귀촌지원 정책들을 선호하는데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귀촌지와 귀촌정보 및 귀촌정책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도출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실증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지역은 충청남도 태안군으로 한정하였다. 태안군은 충청남도에서 수도권과 가깝고 해안경관이 뛰어나 귀촌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기에 선정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귀촌의 개념 및 현황

귀촌이란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거주지나 생활터전을 옮겨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농업과 관계없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전원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귀촌은 농업의 영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거주 장소가 비도시지역인 농·어·산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함을 의미한다. 귀촌인[1]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귀촌인 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는 귀촌인의 조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교육 목적으로 이주한 학생,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주한 군인, 직장 근무지의 변경에 따라 일시적인 이주한 직장인은 농어촌지역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귀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귀농인도 귀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귀촌인과 귀농인을 법률상 구분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왕재억·김갑열(2016)은 귀촌인에 대하여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였지만,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하지 않으며, 별도의 직업이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는 귀촌인의 정의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왕재억, 2017)의 연구에서 귀촌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귀촌은 전통적인 인구이동 유형의 하나로 간주되어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로 볼 수 있다. 인구이동이란 개개인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상이며, 각기 다른 이유로 거주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 원인에 대한 요인을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1〉 2018 귀촌인의 시도별·성별 현황

행정구역별(1)	귀촌인수 (명)			귀촌가구주수 (명)			동반가구원수 (명)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전국	72,474	248,695	223,779	28,343	01,703	26,640	144,131	46,992	97,139
부산광역시	9,515	4,686	4,829	6,299	3,661	2,638	3,216	1,025	2,191
대구광역시	16,592	8,237	8,355	10,253	6,279	3,974	6,339	1,958	4,381
인천광역시	4,650	2,568	2,082	3,583	2,258	1,325	1,067	310	757
울산광역시	10,143	5,414	4,729	6,892	4,419	2,473	3,251	995	2,256
세종특별자치시	4,653	2,582	2,071	3,674	2,244	1,430	979	338	641
경기도	132,613	71,087	61,526	86,552	55,163	31,389	46,061	15,924	0,137
강원도	30,023	15,837	14,186	21,919	13,411	8,508	8,104	2,426	5,678
충청북도	34,287	18,178	16,109	24,168	15,017	9,151	10,119	3,161	6,958
충청남도	46,969	25,336	21,633	34,157	21,369	12,788	12,812	3,967	8,845
전라북도	18,978	9,727	9,251	14,600	8,245	6,355	4,378	1,482	2,896
전라남도	37,349	19,450	17,899	28,562	16,466	12,096	8,787	2,984	5,803
경상북도	53,767	28,176	25,591	38,500	23,371	15,129	15,267	4,805	10,462
경상남도	59,524	30,609	28,915	39,594	24,304	15,290	19,930	6,305	13,625
제주특별자치도	13,411	6,808	6,603	9,590	5,496	4,094	3,821	1,312	2,509

자료: 2019.7 귀촌가구수의 시도별 성별 연령별 현황 재편집. 통계청

2018년 귀촌인의 시도별·귀촌인수, 귀촌가구주수, 동반가구원수 현황을 (표 1)에서 보면, 시·도별 귀촌인수는 경기도가 132,6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남 59,524, 경북 53,769, 충남 46,969, 전남 37,3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귀촌가구주는 경기도 86,5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39,594, 경북 38,500, 충남 34,157, 전남 28,562 등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반가구원수 또한 경기도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순으로 순서에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귀촌인의 지역별 이동은 (표 2)의 귀촌 전 거주 지역별 현황을 통해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이동한 귀촌인의 구성비는 전국 472,474명 중에서 전체의 41.5%인 195,878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23.4%, 서울 14.2%, 인천 3.9 % 순으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민들이 가장 많이 타 지역으로 귀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귀촌인의 귀촌 전 거주 지역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8년		2017년		증감		증감률
전국	472,474	(100.0)	497,187	(100.0)	-24,713	(0.0)	-5.0
서울	67,083	(14.2)	70,402	(14.2)	-3,319	(0.0)	-4.7
부산	32,411	(6.9)	37,437	(7.5)	-5,026	(-0.6)	-13.4
대구	31,350	(6.6)	39,920	(8.0)	-8,570	(-1.4)	-21.5
인천	18,464	(3.9)	19,525	(3.9)	-1,061	(0.0)	-5.4
광주	16,645	(3.5)	15,898	(3.2)	747	(0.3)	4.7
대전	13,805	(2.9)	14,858	(3.0)	-1,053	(-0.1)	-7.1
울산	13,325	(2.8)	12,342	(2.5)	983	(0.3)	8.0
세종	2,002	(0.4)	2,198	(0.4)	-196	(0.0)	-8.9
경기	110,331	(23.4)	120,389	(24.2)	-10,058	(-0.8)	-8.4
강원	17,723	(3.8)	14,812	(3.0)	2,911	(0.8)	19.7
충북	18,057	(3.8)	17,460	(3.5)	597	(0.3)	3.4
충남	20,008	(4.2)	18,630	(3.7)	1,378	(0.5)	7.4
전북	16,574	(3.5)	16,693	(3.4)	-119	(0.1)	-0.7
전남	15,603	(3.3)	16,347	(3.3)	-744	(0.0)	-4.6
경북	31,512	(6.7)	31,358	(6.3)	154	(0.4)	0.5
경남	40,725	(8.6)	42,156	(8.5)	-1,431	(0.1)	-3.4
제주	6,856	(1.5)	6,762	(1.4)	94	(0.1)	1.4

* 증감의 ( )는 구성비 증감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2018년 기준 귀농어 귀촌인통계 결과 보도자료.

이준우·홍유미(2018)는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정책과 사업은 도 단위와 시군 단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도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사업은 정착자금 지원, 교육 체험지원, 귀농귀촌 정보제공, 기타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시·군단위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에는 정착자금지원이 대표적 사업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오상영(2019)은 기초자치단체의 귀농·귀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요인으로 교육(사전교육, 농업기술), 자립환경(일자리제공), 생활적응(주민화합, 고립감 해소), 자금지원(정착금,세제혜택), 컨설팅(상담, 판로, 농업경영) 등 5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2019년 현재 태안군에서 은퇴한 도시민들을 유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귀농·귀촌지원 정책들은(태안군. 2019), 크게 20여개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귀농·귀촌 상담센터 운영,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태안군 귀농학교, 귀농인의 집 운영, 청·장년 창업농장조성,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 중장년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지역 창업농 성공정착 활성화 지원, 귀농인 소득모델 창업지원, 귀농인 농산물 단순가공 기반조성, 귀촌인 생활 원예 텃밭 조성지원, 아름다운 귀농·귀촌 마을 만들기, 귀농인 정착 환경 개선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설계비

지원,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 5가지 사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책들이 귀촌보다는 귀농에 맞추어져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귀촌인들의 귀촌지 선택과 관련하여 노용호·이홍철(2011)은 지가가 저렴하고 작목 주산지이며 도시와 인접하고 자연경관이 좋은 곳을 선호한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민관(2011)은 지역/인구, 주거, 경제, 교육, 문화/의료/복지, 재정, 기반시설이 거주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오병철(2006)은 크게 신체, 경제, 관계, 참여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신체적 요인으로는 자연, 의료, 도움을 하위지표로 선정하고, 경제적 요인으로는 근로, 소비, 지원, 관계요인으로는 자녀, 친구, 세대, 마지막으로 참여요인으로는 소일, 활동, 문화 등을 하위지표로 선정하여 거주지역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김은석·하지영(2016)은 도시민의 농촌 이주요인을 직장생활의 회의에 따른 도피처로써 생각하는 도피형과 자신이 가진 기술로 지역공동체에 봉사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위해 귀촌을 준비하는 도전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전형의 경우 귀촌지를 결정하거나 귀촌정보 및 자치단체의 귀촌지원 정책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귀촌을 결정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일홍·이성우(2010)는 수도권 도시민의 농촌이주는 공간적 분포가 다양하고 거리가 긴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는 권역 내 이동이 주를 이루는 특성을 밝혔다. 성주인·김성아(2012)는 귀농·귀촌 목적지 선택에 관한 연구에서 수도권 거주여부를 기준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과거 수도권에 살았던 도시민들은 이주지로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를 선택한 비율이 높은 반면(82%), 비수도권에 거주했던 도시민들의 경우 이주지로 전 거주지와 동일 시·도(58%)나 동일 광역권(24%)을 택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 거주 도시민의 경우 익숙지 않은 타 지역보다는 원래 살던 도시와 인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탐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박기서·정일훈(2012)은 거주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환경적, 지방행정적 요인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로 지표적 요인을 도출하여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요인을 범주별로 구분한 점과 지방행정적 요인을 지역결정요인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주목된다.

귀촌 정책당국은 귀촌 지역결정과 관련하여, 귀촌지역은 생활여건에 따라 주로 결정되는데 수도권 또는 광역시와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서 쾌적한 자연환경과 의료·복지시설 등 노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8).

선행연구들은 귀촌결정요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귀촌 목적지가 아닌 일반적 인구이동시 거주지 결정과 관련한 요인만 제시하는 경우, 농사지을 여건, 경제, 근로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 요인을 제시하여 구체적 파악이 곤란한 경우, 또는 단순나열 위주여서 귀촌지역 결정요인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 등 여러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귀촌지역 결정요인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서는 요인별 유사성을 고려한 분류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지역결정요인을 유사성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을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환경적, 지방행정적 요인의 다섯 가지로 재분류하는 견해도 있다(박기서·정일훈, 2012). 본 연구는 은퇴 후 도시민들이 귀촌할 경우 어떠한 귀촌요인에 의하여 귀촌지와 귀촌정보를 얻고 귀촌관련 하여 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지원정책 등을 받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요약해 보았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의 설정

수도권 지역 도시민들의 소득, 학력, 연령, 직업에 따라 귀촌지역 결정 항목의 중요도와 귀촌정보의 취득 만족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귀촌자를 위한 귀촌지원 정책들의 중요도 간에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귀촌지역 결정요인으로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의 교육여건, 토지가격, 보건 의료 시설, 생활문화시설, 자연환경, 지역과 주민의 특성 등을 선정하였으며, 귀촌정보의 만족도 요인으로는 매스컴, 귀농·귀촌박람회, 인터넷, 주변의 귀촌인, 자치단체 등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귀촌지원정책 중요도 요인으로는 귀촌자 전원마을 등 집단주거지역 조성, 귀촌 예비체험을 위한 귀촌인의 집 제공, 토지구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 소규모 귀촌마을 조성시 기반시설지원, 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 귀촌관련 신규정책 개발과 홍보,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 등을 선정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연구모형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분석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귀촌지역 결정, 귀촌정보의 만족도, 자치단체의 귀촌지원 정책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귀촌지역 결정, 귀촌정보의 만족도, 자치단체의 귀촌지원 정책은 귀촌인의 농업거주 경험과 태안군의 귀촌 희망자들 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자치단체 귀촌지원 정책은 귀촌인의 농업거주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넷째, 자치단체 귀촌지원 정책은 태안군의 귀촌 희망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자치단체의 귀촌지원 정책은 농촌거주 경험이 있고, 태안군에 귀촌 희망하고 싶은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귀촌지원 정책들은 무엇인가? 등이다.

2. 측정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도

〈표 3〉 귀촌 관련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항목	성분		
	요인1	요인2	요인3
귀촌관련 신규정책 개발과 홍보	.749	.127	.074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	.732	.205	-.036
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708	.130	.021
토지구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	.666	.091	.167
귀촌 예비체험을 위한 귀촌인의 집 제공	.658	-.103	.035
귀촌자 전원마을 등 집단주거지역 조성	.639	-.017	.231
소규모 귀촌마을 조성시 기반시설지원	.601	.053	.191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	.601	.136	-.008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	.588	.178	.073
생활 문화시설	.049	.754	-.008
자연환경	.069	.747	.052
보건 의료시설	.147	.707	-.050
지역과 주민의 특성	.044	.622	.094
지역의 교육여건	.017	.472	.112
수도권과의 거리	.075	.415	.062
토지가격	.139	.412	.087
자치단체	.068	.049	.707
매스컴	.171	.063	.702
귀농·귀촌박람회	.214	.079	.660
인터넷	.004	.015	.615
주변의 지인(귀촌인)	.038	.182	.606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수도권 지역 도시민의 귀촌지역 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귀촌지원 정책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태안군청에서 직원들이 2016년 서울에서 개최한 귀농·귀촌 박람회에 직접 참여하여 수도권 지역 주민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로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을 통해 수집된 로데이터 자료는 코딩과정을 거쳐 한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문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귀촌지역, 귀촌정보, 자치단체의 귀촌지원정책 들의 21개 설문문항에 대하여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12로 나타났다.

또한, 항목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분산의 43.82%가 설명되고 있다. 0.49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는 문항을 해당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 첫 번째 요인은 귀촌지역 결정요인 두 번째

요인은 귀촌정보 취득요인 세 번째 요인은 자치단체 귀촌지원정책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총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도시민의 귀촌지역 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귀촌지원 정책의 영향요인은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Ⅳ. 실증분석

1. 응답자 주요특성

수도권 지역 도시민들에 대한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구분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우선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62.0%, 여자 38.0%로 남자 응답의 비율이 여자 응답자보다 많았다. 직업은 전문직 24.6%, 자영업 28.7%, 회사원 24.0%, 기타 22.8%, 순으로 응답하였다. 농촌정주 경험의 유무와 관련하여 있다는 48.0%, 없다는 응답은 52.0%이다. 학력은 고졸 31.0%, 대졸 55.0%, 기타 14.0% 이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100만원대 22.2%, 200만원대 21.6%, 300만원대 23.4%, 400만원대 이상 32.7%이다. 귀촌의향에 대하여는 있다 72.5%, 없다 27.5% 등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개인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06	62.0
	여자	55	38.0
직업	전문직	32	24.6
	자영업	49	28.7
	회사원	41	24.0
	기 타	39	22.8
농촌 정주경험	있다	82	48.0
	없다	86	52.0
학력	고졸	53	31.0
	대졸	94	55.0
	기타	24	14.0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대	38	22.2
	200만원대	37	21.6
	300만원대	40	23.4
	400만원대 이상	56	32.7
귀촌의향	있다	124	72.5
	없다	47	27.5

2. 평균비교

1) 귀촌지 결정시 고려항목의 중요도

귀촌지역 선택 시 고려하는 항목들에 대하여 평균을 다음의 〈표 5〉에서 비교하였는데 분석결과 자연환경(4.19), 보건의료시설(4.17), 지역과 주민의 특성(4.04), 토지가격(3.97), 생활문화 시설(3.85), 수도권과의 거리(3.70), 지역의 교육여건(2.95) 순으로 중요도의 강도를 알 수 있다. 농촌 정주경험이 있고 귀촌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에는 귀촌지역 선택 시 보건의료시설과 자연환경 및 지역주민의 특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 5〉 귀촌지 결정시 고려항목의 중요도

항목 구분	설문응답자 전체			농촌정주경험*귀촌희망자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수도권과의 거리	171	3.70	0.98	63	3.67	0.98
지역의 교육여건	171	2.95	1.06	63	3.10	1.09
토지가격	171	3.97	0.98	63	3.97	1.05
보건의료시설	171	4.17	0.82	63	4.24	0.80
생활문화시설	171	3.85	0.87	63	4.00	0.82
자연환경	171	4.19	0.89	63	4.24	0.93
지역과 주민의 특성	171	4.04	0.89	63	4.19	0.86

2) 귀촌정보의 만족도

귀촌정보를 취득하는 방법들에 대한 항목들에 대한 만족도를 〈표 6〉에서 평균비교해 보면 귀농·귀촌 박람회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하여 가장 만족(3.97)을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변의 지인(귀촌인)을 통하거나(3.75) 인터넷(3.53), 자치단체(3.48), 매스컴(3.46), 순으로 만족하고 있다. 농촌 정주경험이 있고 귀촌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에 귀촌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귀농·귀촌박람회와 주변의 지인(귀촌인)을 통해 귀촌정보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귀촌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의 중요도

항목 구분	설문응답자 전체			농촌정주경험*귀촌희망자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매스컴	171	3.46	0.80	63	3.57	0.86
귀농·귀촌박람회	171	3.97	0.80	63	3.89	0.85
인터넷	171	3.53	0.81	63	3.46	0.84
주변의지인(귀촌인)	171	3.75	0.87	63	3.76	0.89
자치단체	171	3.48	0.90	63	3.51	0.90

3) 귀촌자 지원정책들에 대한 항목별 중요도

자치단체의 귀촌자 지원정책들에 대한 항목별 중요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모든 항목들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개별 항목별 중요순위를 살펴보면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4.47),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4.42), 토지구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4.32), 소규모 귀촌마을 조성시 기반시설지원(4.27), 귀촌인 건축 설계비 지원(4.26) 등의 순으로 자치단체의 귀촌자 지원정책들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 정주경험이 있고 귀촌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에자치단체의 귀촌자 지원정책들에 대하여 대동소이하게 모든 항목들을 중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 귀촌인 건축 설계비 지원, 토지구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중요시 하고 있다.

〈표 7〉 자치단체의 귀촌자 지원정책들에 대한 항목별 중요도

항목 구분	설문응답자 전체			농촌정주경험*귀촌희망자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귀촌자 전원마을 등 집단주거지역 조성	171	4.14	0.73	63	4.22	0.68
귀촌 예비체험을 위한 귀촌인의 집 제공	171	4.11	0.81	63	4.22	0.77
토지구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	171	4.32	0.68	63	4.35	0.72
소규모 귀촌마을 조성시 기반시설지원	171	4.27	.075	63	4.27	0.81
귀촌인 건축 설계비 지원	171	4.26	0.74	63	4.43	0.71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	171	4.19	0.83	63	4.29	0.85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	171	4.47	0.65	63	4.54	0.64
귀촌관련 신규 정책개발과 홍보	171	4.17	0.83	63	4.25	0.76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	171	4.42	0.74	63	4.57	0.62

3. 집단평균 비교

1) 귀촌지역 중요도

귀촌지역 결정 항목의 중요도에 대하여 성별, 소득, 학력, 연령, 직업들 간에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귀촌지역 결정과 관련하여 성별, 소득, 학력, 연령, 직업 모두 자연환경과 보건의료시설, 지역주민의 특성, 토지가격 등을 다른 요인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귀촌지역 결정항목의 중요도

구분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의 교육여건	토지 가격	보건 의료시설	생활 문화시설	자연 환경	지역과 주민의 특성
성별	남자	3.58	2.89	3.97	4.11	3.79	4.14	3.97
	여자	3.91	3.06	3.97	4.26	3.94	4.26	4.15
	합계	3.7	2.95	3.97	4.17	3.85	4.19	4.04
소득	100만원대	3.61	2.68	3.66	4.13	3.95	4.08	4.03
	200만원대	3.49	2.86	3.89	4.05	3.86	4.11	3.95
	300만원대	3.85	3.07	4.27	4.13	3.55	4.08	3.97
	400만원이상	3.8	3.11	4.02	4.30	3.98	4.39	4.16
	합계	3.7	2.95	3.97	4.17	3.85	4.19	4.04
학력	고졸	3.58	2.94	4.00	4.28	3.96	4.30	4.08
	대졸	3.73	2.94	4.03	4.06	3.77	4.07	3.97
	기타	3.83	3.04	3.67	4.33	3.92	4.38	4.25
	합계	3.7	2.95	3.97	4.17	3.85	4.19	4.04
연령	40대	3.44	3.44	3.84	4.09	3.69	4.13	4.16
	50대	3.68	2.93	4.03	4.20	3.88	4.22	4.08
	60대	3.86	2.73	3.97	4.17	3.89	4.17	3.94
	합계	3.7	2.95	3.97	4.17	3.85	4.19	4.04
직업	전문직	3.71	2.93	3.81	4.02	3.74	4.05	4.12
	자영업	3.84	2.86	3.94	4.16	3.76	4.12	3.78
	회사원	3.46	2.85	4.27	4.22	3.93	4.27	4.22
	기 타	3.77	3.21	3.87	4.28	4	4.33	4.1
	합계	3.7	2.95	3.97	4.17	3.85	4.19	4.04

구체적으로 성별에 있어서 여성이 지역과 주민의 특성요인을 남성들 보다 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소득 항목에서는 100만원대 소득자들이 보건 의료시설 등에 대하여 200만원대 이상의 소득자들은 자연환경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학력에서 고졸은 자연환경을 대졸은 보건의료시설을 중시하고 있다. 연령에서 40대는 지역과 주민의 특성, 50대는 자연환경을 60대는 보건의료시설을 중시하고 있다. 직업에서 전문직들은 자연환경을 자영업은 보건의료시설을 회사원은 토지가격과 자연환경의 요인을 중시하고 있다.

2) 귀촌정보의 만족도

귀촌정보 취득 항목들의 만족도에 대하여 성별, 소득, 학력, 연령, 직업들 간에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귀촌정보의 만족도는 성별, 소득, 학력, 연령, 직업과 관련하여 모두 귀농·귀촌박람회, 주변 지인(귀촌인), 인터넷, 자치단체, 매스컴 등을 통해 얻는 정보들

순으로 만족하고 있다.

〈표 9〉 귀촌정보 취득 항목들에 대한 만족도

구분		매스컴	귀농·귀촌박람회	인터넷	주변의 지인(귀촌인)	자치단체
성별	남자	3.43	3.92	3.61	3.69	3.46
	여자	3.51	4.05	3.38	3.86	3.51
	합계	3.46	3.97	3.53	3.75	3.48
소득	100만원대	3.58	3.84	3.45	3.74	3.34
	200만원대	3.46	4.16	3.49	3.76	3.73
	300만원대	3.43	3.90	3.60	3.70	3.45
	400만원이상	3.41	3.98	3.55	3.8	3.43
	합계	3.46	3.97	3.53	3.75	3.48
학력	고졸	3.55	4.00	3.45	3.72	3.40
	대졸	3.39	3.95	3.56	3.80	3.55
	기타	3.54	4.00	3.54	3.67	3.38
	합계	3.46	3.97	3.53	3.75	3.48
연령	40대	3.44	3.94	3.47	3.84	3.31
	50대	3.42	4.07	3.72	3.86	3.49
	60대	3.52	3.87	3.32	3.59	3.56
	합계	3.46	3.97	3.53	3.75	3.48
직업	전문직	3.45	3.98	3.43	3.76	3.45
	자영업	3.39	3.86	3.67	3.63	3.47
	회사원	3.39	4.07	3.49	3.85	3.46
	기 타	3.64	4.00	3.49	3.79	3.54
	합계	3.46	3.97	3.53	3.75	3.48

3) 자치단체의 귀촌 지원정책 중요도

자치단체의 귀촌 지원정책 항목들의 중요도에 대해 성별, 소득, 학력, 연령, 직업들 간에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성별, 소득, 학력, 연령, 직업에 따른 자치단체의 귀촌 지원정책의 중요도 항목들에 대하여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 토지구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 소규모 귀촌마을 조성시 기반시설지원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성별과 관련하여 남자들은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을 중시한 반면 여성들은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 등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 소득과 관련하여 200에서 300만원대는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에 대하여 400만원대 이상은 는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 등에 대하여 중요시 하고 있다.

〈표 10〉 자치단체의 귀촌 지원정책 항목의 중요도

구분		귀촌자 전원마을 등 집단 주거지역 조성	귀촌 예비체험을 위한 귀촌인의 집 제공	토지구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	소규모 귀촌마을 조성시 기반시설 지원	귀촌인 건축 설계비 지원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	지역 주민과의 친밀감 조성	귀촌관련 신규정책 개발과 홍보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안내
성별	남자	4.11	4.08	4.33	4.28	4.25	4.10	4.57	4.17	4.36
	여자	4.18	4.15	4.31	4.26	4.28	4.32	4.31	4.17	4.51
	합계	4.14	4.11	4.32	4.27	4.26	4.19	4.47	4.17	4.42
소득	100만원대	3.97	3.95	4.05	4.18	4.13	4.18	4.37	3.97	4.21
	200만원대	4.27	4.35	4.62	4.43	4.43	4.27	4.46	4.35	4.59
	300만원대	4.3	4.18	4.43	4.3	4.32	4.25	4.63	4.3	4.50
	400만원이상	4.05	4.02	4.23	4.21	4.20	4.09	4.43	4.09	4.37
	합계	4.14	4.11	4.32	4.27	4.26	4.19	4.47	4.17	4.42
학력	고졸	4.11	4.04	4.32	4.40	4.43	4.25	4.47	4.15	4.51
	대졸	4.15	4.19	4.34	4.22	4.19	4.19	4.48	4.22	4.38
	기타	4.17	3.96	4.25	4.21	4.17	4.04	4.42	4	4.33
	합계	4.14	4.11	4.32	4.27	4.26	4.19	4.47	4.17	4.42
연령	40대	4.06	4.28	4.44	4.22	4.12	4.19	4.19	4.09	4.41
	50대	4.17	4.13	4.24	4.34	4.24	4.22	4.47	4.16	4.34
	60대	4.14	4.00	4.37	4.22	4.37	4.14	4.60	4.22	4.51
	합계	4.14	4.11	4.32	4.27	4.26	4.19	4.47	4.17	4.42
직업	전문직	4.31	4.19	4.38	4.36	4.38	4.21	4.57	4.36	4.48
	자영업	4.08	3.88	4.12	4.27	4.22	4.08	4.49	4.04	4.27
	회사원	4.05	4.20	4.46	4.39	4.17	4.29	4.46	4.2	4.49
	기 타	4.13	4.23	4.36	4.08	4.28	4.18	4.33	4.1	4.46
	합계	4.14	4.11	4.32	4.27	4.26	4.19	4.47	4.17	4.42

학력과 관련해서 고졸은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 등을 대졸이상의 학력자들은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령과 관련해서 40대는 토지구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대하여 50대 이상은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 정책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직업과 관련해서 전문직과 자영업은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 정책을 회사원은 토지구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 항목 등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4) 케이스 선택에 따른 귀촌 지원정책 중요도

자치단체의 귀촌자 지원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항목간의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171개의 빈도 중에서 농촌의 정주 경험이 있으면서 태안지역으로 귀촌을 희망하고 있는 유

효빈도 수 63(37.4%)를 케이스를 선택하여 〈표 11〉과 같이 분석하였다. 자치단체의 귀촌자 지원정책 항목의 중요도 순위에 대한 평균비교 결과 성별, 소득, 학력, 연령, 직업에 따라서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 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토지구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 소규모 귀촌마을 조성 시 기반시설지원, 귀촌관련 신규정책 개발과 홍보, 귀촌 예비체험을 위한 귀촌인의 집 제공, 귀촌자 전원마을 등 집단주거지역 조성 등의 항목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11〉 자치단체의 귀촌 지원정책 항목의 중요도 순위에 대한 평균비교

구분		귀촌자 전원마을 등 집단 주거지역 조성	귀촌 예비체험을 위한 귀촌인의 집 제공	토지구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	소규모 귀촌마을 조성시 기반시설지원	귀촌인 건축 설계비 지원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	지역 주민과의 친밀감 조성	귀촌관련 신규정책 개발과 홍보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안내
성별	남자	4.12	4.10	4.37	4.32	4.41	4.17	4.59	4.27	4.54
	여자	4.41	4.45	4.32	4.18	4.45	4.5	4.45	4.23	4.64
	합계	4.22	4.22	4.35	4.27	4.43	4.29	4.54	4.25	4.57
소득	100만원대	3.92	4.00	4.15	3.92	4.23	4.23	4.46	4.23	4.38
	200만원대	4.17	4.25	4.58	4.33	4.33	4.50	4.50	4.25	4.50
	300만원대	4.27	4.27	4.27	4.09	4.55	3.91	4.55	4.09	4.64
	400만원이상	4.37	4.3	4.37	4.48	4.52	4.37	4.59	4.33	4.67
	합계	4.22	4.22	4.35	4.27	4.43	4.29	4.54	4.25	4.57
학력	고졸	4.20	4.20	4.25	4.20	4.5	4.35	4.40	4.15	4.60
	대졸	4.27	4.33	4.42	4.33	4.45	4.36	4.67	4.42	4.61
	기타	4.10	3.90	4.30	4.20	4.20	3.90	4.40	3.90	4.40
	합계	4.22	4.22	4.35	4.27	4.43	4.29	4.54	4.25	4.57
연령	40대	4.33	4.58	4.42	4.17	4.42	4.42	4.33	4.33	4.58
	50대	4.23	4.19	4.27	4.38	4.38	4.27	4.46	4.23	4.54
	60대	4.16	4.08	4.40	4.20	4.48	4.24	4.72	4.24	4.60
	합계	4.22	4.22	4.35	4.27	4.43	4.29	4.54	4.25	4.57
직업	전문직	4.33	4.33	4.52	4.33	4.67	4.33	4.76	4.48	4.67
	자영업	4.15	4.00	4.15	4.46	4.46	4.15	4.62	4.38	4.69
	회사원	4.00	4.00	4.18	4.36	4.18	4.27	4.27	4.09	4.27
	기 타	4.28	4.39	4.39	4.00	4.28	4.33	4.39	4.00	4.56
	합계	4.22	4.22	4.35	4.27	4.43	4.29	4.54	4.25	4.57

4. 농촌정주 경험과 귀촌희망 여부에 대한 차이분석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도시민이 귀촌지역 결정과 귀촌정보 습득 및 자치단체의 귀촌지원정책 등의 항목들에 선택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업 및 농촌경주경험과 귀촌희망 여부유무 등에 따라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12〉에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라서 귀촌지 결정시 수도권과의 거리 고려(p=0.03), 자치단체의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 정책(p=0.01) 등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귀촌지 선택시 지역의 교육여건 고려(p=0.01), 인터넷을 통한 귀촌정보 습득(p=0.01), 자치단체의 귀촌지원 정책의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p=0.01) 등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서는 토지가격을 고려한 귀촌지 결정(p=0.04), 자치단체의 귀촌지원 정책인 토지구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p=0.00)에 대하여 차이를 보였다. 농촌정주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생활 문화시설을 고려하여 귀촌지역 결정(p=0.02), 자치단체의 귀촌지원 정책에 해당하는 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p=0.02)에 대하여, 귀촌희망 여부에 따라서는 매스컴을 통한 귀촌정보 취득(p=0.04), 귀촌 예비체험을 위한 귀촌인의 집 제공(p=0.04) 등의 항목들이 통계학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귀촌항목 분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	비고
수도권과의 거리 기준으로 귀촌지 결정	3.70	0.98	4.45	1	4.45	4.78	.03	성별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	4.47	0.65	2.69	1	2.69	6.50	.01	
지역의 교육여건 고려하여 귀촌지 결정	2.95	1.06	10.67	2	5.33	5.01	.01	연령
인터넷을 통한 귀촌정보 습득	3.53	0.81	5.82	2	2.91	4.66	.01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	4.47	0.65	3.67	2	1.84	4.48	.01	
토지가격을 고려한 귀촌지 결정	3.97	0.98	7.78	3	2.59	2.79	.04	소득
토지구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	4.32	0.68	6.96	3	2.32	5.35	.00	
생활 문화시설을 고려한 귀촌지	3.85	0.87	4.25	1	4.25	5.80	.02	농촌경험
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4.26	0.74	3.06	1	3.06	5.73	.02	
매스컴을 통한 귀촌정보 취득	3.46	0.80	2.77	1	2.77	4.43	.04	귀촌희망
귀촌 예비체험을 위한 귀촌인의 집 제공	4.14	0.81	2.50	1	2.50	3.89	.04	

2) 농촌정주 경험 유무 차이

농촌거주 경험유무에 따라서 자치단체 귀촌지원정책 항목들에 대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표 13〉에서 보여주고 있다. T-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촌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82명)과 농촌에 거주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89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에서 보여 주듯이 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항목과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항목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항목들에 대하여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농촌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과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가 실질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13〉 농촌정주 경험 유무에 대한 T-검정

자치단체 귀촌지원정책 항목	평균	표준 편차	F	T	df	P (양측)
귀촌자 전원마을 등 집단주거지역 조성	4.14	0.73	0.43	1.36	169	.17
귀촌 예비체험을 위한 귀촌인의 집 제공	4.11	0.81	0.26	0.17	169	.87
토지구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	4.31	0.72	0.11	1.04	169	.30
소규모 귀촌마을 조성시 기반시설지원	4.27	0.81	0.36	0.5	169	.62
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4.22	0.73	0.16	2.39	169	.02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	4.27	0.84	0.3	0.86	169	.39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	4.47	0.64	0.3	1.56	169	.12
귀촌관련 신규정책 개발과 홍보	4.18	0.83	0.01	1.49	169	.14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	4.68	0.73	1.95	1.86	169	.04

3) 귀촌희망 여부 차이

전체 응답자 171명 중에서 귀촌 희망여부에 따라서 집단간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표 14〉와 같이 태안군으로 귀촌을 희망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124명)과 귀촌을 희망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47명) 등으로 구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에서 보여 주듯이 귀촌 예비체험을 위한 귀촌인의 집 제공 항목에서 t=1.972, 유의확률=.04 (p〈.05)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항목들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귀촌희망자의 경우 귀촌 전의 예비경험을 중요시하고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질적인 귀촌의 의사결정에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14〉 귀촌희망 여부에 대한 T-검정

자치단체 귀촌지원정책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T	df	P (양측)
귀촌자 전원마을 등 집단주거지역 조성	4.15	0.72	0.286	-0.094	169	.93
귀촌 예비체험을 위한 귀촌인의 집 제공	4.05	0.81	0.075	1.972	169	.04
토지구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	4.31	0.70	0.001	0.781	169	.44
소규모 귀촌마을 조성시 기반시설지원	4.24	0.76	0.382	1.121	169	.26
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4.24	0.75	0.479	1.011	169	.31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	4.17	0.85	0.062	0.574	169	.57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	4.47	0.69	4.067	-0.003	169	1
귀촌관련 신규정책 개발과 홍보	4.15	0.85	0.335	0.609	169	.54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	4.44	0.77	3.266	1.276	169	.2

4) 농촌정주 경험과 귀촌희망 여부에 대한 T-검정

전체 응답자 171명 중에서 농촌거주 경험이 있고 귀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 집단(63명)과 농촌거주 경험도 없고 귀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집단(23명)을 케이스 선택하여 자치단체 귀촌 지원정책 항목들에 대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표 15〉와 같이 T-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 농촌정주 경험유무와 귀촌의향에 대한 T-검정

자치단체 귀촌지원정책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t	df	P (양측)
귀촌자 전원마을 등 집단주거지역 조성	4.2	0.68	1.862	0.76	89	.04
귀촌 예비체험을 위한 귀촌인의 집 제공	4.2	0.77	0.483	1.269	89	.21
토지구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	4.4	0.72	0.001	1.436	89	.15
소규모 귀촌마을 조성시 기반시설지원	4.3	0.81	0.081	1.466	89	.15
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4.4	0.71	0.179	2.113	89	.04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	4.3	0.85	0.227	0.708	89	.48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	4.5	0.64	4.537	0.896	89	.37
귀촌관련 신규정책 개발과 홍보	4.3	0.76	0.087	1.595	89	.11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	4.6	0.62	7.114	1.997	89	.04

자치단체의 귀촌 지원정책들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귀촌자 전원마을 등 집단주거지역 조성 정책, 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정책, 그리고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 정책에서 집단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촌에 거주한 경험 및 긍정적인 귀촌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목표집단으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다른 정책보

다는 더 우선순위를 두어 실질적인 귀촌정책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자치단체 귀촌지원정책 항목 중 선별항목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은 목적변수(또는 종속변수)가 주로 양적인 데이터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용된다. 그러나 목적변수(또는 종속변수)가 질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판별분석이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은 선형 회귀분석과 유사하고, 비선형적인 효과를 통합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란 단지 두 개의 값만을 가지는 목적변수(예를 들면, 성별이나, 주택소유의 유무 등과 같은 명목척도)와 설명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하나의 통계기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목적변수가 이원적인 경우를 흔히 비선형 회귀분석이라고[2] 한다.

지면상의 관계로 선별된 항목에 대하여 간략하게 〈표 16〉과 같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듯이 귀촌희망자의 경우 귀촌 전의 예비경험을 중요시하고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질적인 귀촌의 의사결정에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언급하였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귀촌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의향이 없는 응답자에 비하여 '귀촌 예비체험을 위한 귀촌인의 집 제공'을 1.9배 즉 190% 더 원하고 있다.[3]

〈표 16〉 자치단체 귀촌지원정책 항목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자치단체 귀촌지원정책 항목	회귀계수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귀촌 예비체험을 위한 귀촌인의 집 제공	0.64	0.28	2.34	161	.02	1.90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	1.29	0.35	3.64	161	.00	3.64

2)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설명변수들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경우(1)와 발생하지 않은 경우(0)를 예측하기보다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다. 예를 들어 목적변수는 0(실패)과 1(성공)로 나타내며, 따라서 예측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로지스틱 반응함수에서 설명변수와 목적변수의 관계는 S자 모양의 비선형(nonlinear)을 보이고 있다. 설명변수의 수준이 높으면 성공할 확률은 증가한다.

3) 로지스틱 반응함수는 회귀계수에 대하여 비선형이기 때문에 선형화하기 위해서는 자연 로그를 취하는 로지트 변환(logit transformation)을 사용한다. π의 로지트 변환이란 $\ln(\pi/(1-\pi))$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설명변수가 한 개인 선형 로지스틱 모형은 다음과 같다. $ln(\frac{\pi}{1-\pi}) = \alpha + \beta x$. 예컨대 회귀계수 β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즉 설명변수(x)를 한 단위 증가시키면 exp(β)만큼 평균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β=2.0이라면 설명변수를 한 단위 증가시키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보다 2.0배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 정책에 대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에 대하여 3.64배 즉 364% 더 적극적 이다. 이는 귀촌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여성들의 지역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 견해를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수도권 지역 도시민의 인구유입의 한 대안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귀촌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귀촌 가구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은퇴 후 대도시를 떠나 고향이나 시골로 귀촌하여 조용히 남은여생을 조용히 보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은퇴를 하였거나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이 귀촌을 생각하거나 선호하는 이유는 실업 및 은퇴, 도시의 취업난, 고물가, 주택난 등 도시 압출요인과 농촌의 쾌적한 자연환경, 건강추구, 전원생활, 주거생활비 절감 등 농촌 흡인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왕재억, 2017).

본 연구 대상 지역인 태안군도 예외는 아니 여서 은퇴한 수도권 도시민들을 태안군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하여 다양한 귀촌 지원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도시민들이 귀촌 지역을 결정하거나 귀촌정보를 습득하는 경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들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고 태안군과 같은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귀촌지원 정책들을 추진해야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촌지역 결정, 귀촌정보의 만족도, 자치단체의 귀촌지원 정책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① 귀촌지역 결정과 관련하여 성별, 소득, 학력, 연령, 직업 모두 자연환경과 보건의료시설, 지역주민의 특성, 토지가격 등을 다른 요인보다 중시하고 있었다. ② 귀촌정보의 만족도는 성별, 소득, 학력, 연령, 직업과 관련하여 모두 귀농·귀촌 박람회, 주변 지인(귀촌인), 인터넷, 자치단체, 매스컴 등을 통해 얻는 정보들 순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③ 자치단체의 귀촌 지원정책의 중요도 항목들은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 토지구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 소규모 귀촌마을 조성 시 기반시설지원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귀촌지역 결정, 귀촌정보의 만족도, 자치단체의 귀촌지원 정책은 귀촌인의 농업거주 경험과 태안군의 귀촌 희망자들 간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① 귀촌지역 선택 시 보건의료시설과 자연환경 및 지역주민의 특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② 귀촌정보를 취득

하는 경우에는 귀농·귀촌박람회와 주변의 지인(귀촌인)을 통해 귀촌정보를 얻고 있었다. ③ 자치단체의 귀촌자 지원정책들에 대하여 대동소이하게 모든 항목들을 중시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 귀촌인 건축 설계비 지원, 토지구입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중요시 하고 있었다.

셋째, 자치단체 귀촌지원 정책은 귀촌인의 농업거주 유무에 따라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항목과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항목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넷째, 자치단체 귀촌지원 정책은 태안군의 귀촌 희망 유무에 따라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귀촌 예비체험을 위한 귀촌인의 집 제공 항목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자치단체의 귀촌지원 정책은 농촌거주 경험이 있고, 태안군에 귀촌 희망하고 싶은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귀촌지원 정책들에 대해서는 귀촌자 전원마을 등 집단주거지역 조성, 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그리고 건축 인·허가에 대한 행정절차 안내 등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따라서 태안군에서는 천혜의 아름다운 해양과 내륙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귀촌자들이 태안군으로 귀촌하여 편안히 여생을 보내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주 희망자가 귀촌지를 결정할 때 사전에 구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예비 귀촌인들이 귀촌지역 정보 취득과정에서는 귀농 귀촌 박람회와 주변의 지인(귀촌인)과 인터넷을 통해 귀촌정보를 얻는 것에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안군에서는 귀농·귀촌 박람회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와 인터넷을 통한 귀촌 종합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귀촌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귀촌 희망자들은 자치단체의 귀촌지원 정책들 중에서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과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태안군에서는 특히 여성들의 지역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 견해를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시급하다고 여겨지며,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귀촌관련 신규정책 개발하며, 귀촌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반시설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귀촌준비부터 실행 및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안내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은석·하지영. (2016).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 선택 동기와 준비경험: 대졸 남성 퇴직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6(2): 419-442.

김종선. (2017).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혁신.「과학기술정책」, 24(2): 24-36.

노승철. (2015). 은퇴 후 귀촌 희망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지역간 차이 분석.「지역연구」, 31(2): 29-45.

노용호·이홍철. (2011). 농촌이주의사 결정요인.「대한관광경영학회 발표논문집」, 377-390.

농림축산식품부. (2016).「2017-2021 귀농·귀촌 지원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017).「2017 귀농 귀촌인 통계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7).「귀농 귀촌의 법적 정의와 정책 및 통계와의 상관관계」.

농림축산식품부. (2018).「2018 귀농 귀촌인구수 처음으로 50만 돌파 보도자료」.

박기서·정일훈. (2012). 귀촌도시민의 선호지역과 결정요인.「주거환경」, 10(2): 91-105.

오병철. (2006).「도시 은퇴 연령층의 노후 거주지 선택에 관한 연구: 수도권 거주 은퇴연령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상영. (2019). 군지자체 귀농·귀촌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요인의 중요도 인식 수준.「디지털융복합연구」, 17(1): 1738-1916.

왕재억. (2017).「귀촌 영향요인에 따른 정주의식에 관한 연구: 귀촌정책과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왕재억·김갑열. (2016). 귀촌거주자의 귀촌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대한부동산학회지」, 34(1): 59-79.

우성호. (2014).「귀농·귀촌의 결정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6개 시·군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민관. (2011).「중소도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상호. (2018).「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이준우·홍유미. (2018). 귀농귀촌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과 욕구.「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0): 217-228.

정일홍·이성우. (2010). 농촌이주 도시민의 특성과 공간적 선호.「농촌사회」, 20(2): 163-190.

정한모. (2002).「귀농인의 농촌생활과 영농정착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명숙·박성정. (2012). 귀농·귀촌 여성의 농촌생활 경험 분석: 진안지역 사례,「한국여성정책연구원」, 83: 275-297.

통계청. (2019).「귀촌가구주 및 귀촌가구수의 시도별 성별 연령별 현황」.

통계청. (2018).「2018년 기준 귀농어 귀촌인통계 결과 보도자료」.

태안군. (2019).「태안군 귀농·귀촌 길라잡이」.

허철무. (2014).「귀농자의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접수일(2019년 11월 15일)
수정일(2019년 12월 09일)
게재확정일(2019년 12월 13일)

〈국문초록〉

수도권 지역 도시민의 귀촌지역 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귀촌지원 정책의 영향요인 분석

본 논문은 수도권 지역의 귀촌 희망자들이 성별, 연령, 직업, 소득, 지역에 따라서 귀촌지역 결정과 귀촌정보 취득 및 자치단체의 귀촌지원 정책들에 대하여 집단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귀촌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도시민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지역 도시민들이 귀촌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것 보다는 환경적인 것과 건강한 삶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귀촌인들이 주로 귀농 귀촌 박람회와 주변의 지인을 통해 귀촌정보를 얻는 것에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귀촌지원 정책들에 대하여 귀촌 희망자들은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과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제어: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귀촌, 귀촌지원정책, 도시민